

우회상장 금지·발행공시 의무화 등 가닥… ‘가상자산법’ 속도

금융위, 법안 초안 국회 전달
스테이블코인 해외서 발행시
본국 인가, 국내 지점 갖춰야
은행 과반 컨소시엄 등 쟁점 여전

정치권이 가상자산 규제 현실화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근거 마련을 포함한 ‘가상자산 선진화’에 속도를 낸다. 금융당국은 향후 관련법 마련의 근거가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초안(정부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할 예정으로, 여당은 내년 초 입법을 목표로 검토에 돌입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놓고 관계기관의 견해차가 여전한 만큼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도 남았다.

◆ 가상자산법 ‘정부안’ 윤곽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내용(안)’을 보고했다. 초안에는 기존에 논의됐던 주요 내용에 더해 ▲가상자산의 발행정보 공시 의무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시 한국 법인 설치 의무화 ▲거래 사고 발생 시 거래소의 책임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내 가상자산 판매 시 충분한 정보공시를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월 발대식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실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발행한 뒤 국내에 우회상장하는 관행을 막고, 시장 내에 발행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한다.

또한 금융위는 특히 발행공시 주체를 ‘발행에 적극 참여한 자’로 명시해 발행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이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대다수 해외발행 가상자산의 국내 유통을 제한하는 형태로도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테더(USDT)나 서클(USDC)을 비롯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본국 인가와 국내 지점을 모두 갖춰야 국내

유통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발행규모가 큰 스테이블코인은 한은에 자료요구권과 공동검사 요구권도 부여하도록 한다.

테더와 서클을 비롯한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환경에서도 대규모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지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유통이 불가능해진다.

가상자산 거래 사고 발생 시 거래소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킹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사고와 비슷한 책임을 부과하는 ‘과다실 손해배상책임’ 부과와 함께, 신규 가상자산 상장 시 ‘상장 보고서’ 작성도 의무화한다.

◆ 與, 가상자산 선진화 입법 ‘박차’

정부안은 아직 국회에 전달되지 않았

지만, 민주당은 이날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지난 9월 발대식 이후 가상자산 규제 현실화, 원화 스테이블 발행 허용 및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해 왔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입법절차에 돌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예정대로라면 정부안은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지만,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들은 정부안 마련이 더 지체된다면 자체적으로라도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정문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은 “당 초에는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하려 했으나,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며 회의도 연

내년 가계대출 조인다… 5대은행, 증가율 2% 목표

정부 고강도 규제 맞춰 철저 관리
주담대·전세대출 실수요자 우려

주요 은행이 내년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을 다시 한번 조일 전망이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맞춰 대출 총량을 줄여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것.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7조 47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은행은 올해 초 대출 총량 증가액을 8조 690억원으로 잡았다. 당초 예상과는 7.4% 낮지만, 당국이 6·27 대책

발표 이후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액을 당초 설정한 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달라는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는 이달 들어 2617억원 줄었지만, 신용대출이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간 영향이 컸다.

은행들은 정부의 기조에 따라 내년 가계부채 총량 목표치도 올해와 비슷하게 잡을 전망이다. A은행은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정책대출 제외)를 올해 말 잔액보다 1.7%, B은행은 2% 많은 수준으로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은행 등 올해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잡은 목표보다 가계대출 증가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당장 내년 1월부터 영업에 반영되는 만큼 가이드라인이 최대한 일찍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당분간 가계대출 규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덕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국 경제의 부동산 문제는 잠재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내년에도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하다”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낮게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올해 명목 GDP 증가율은 4%다. 관행보다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주담대,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정부의 총량 관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리마저 오르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고정형(혼합형)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무보증·AAA) 은행채 금리는 평균 연 3.51%다.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8월 14일 연 2.799% 이후 0.711%포인트(p) 뛰었다. 변동형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도 석 달 연속 뛰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0월 2.57%에서 11월 2.81%로 올랐다.

이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절대 수준이 높은 가계부채를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증가율로 관리해 연착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왼쪽부터)대우건설 도시정비사업담당 도정훈 상무, 프랑스 빌모트사 회장 장미셸 빌모트, 공작아파트 재건축 운영위원회 김철훈 위원장이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우건설

대우건설-프랑스 빌모트사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외관 특화디자인 본격협업

대우건설은 프랑스 빌모트(WILMOTTTE)사, 공작아파트 재건축 운영위원회와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외관 특화 디자인을 위해 본격적인 협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에서 이와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수준의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프리미엄 디자인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빌모트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 리노베이션, 엘리제궁 등 프랑스 주요 랜드마크 프로젝트 등을 수행해온 세계적인 설계사로 예술성과 실용성을 결합한 독창적 디자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업으로 공작아파트는 여의도 스카이라인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하이엔드 주거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대우건설과 빌모트의 주요 관계자는 MOU 체결 후 공작아파트로 이동해 사업지를 직접 살펴봤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은행, 개인신용대출 금리 7% 이하 제한

금융취약계층 금리부담 덜기로
내달 2일부터 재약정 맞춰 적용

우리은행이 개인신용대출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시행한다.

우리금융은 지난 9월 출범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에 따라 ▲신용대출금리 상한제 도입 ▲긴급생활비대출 상품 출시 ▲장기연체 소액대출 추심 중단 및 연체 후 미수이자 면제 ▲계열사 대출 갈아타기 상품 출시

등 포용금융 핵심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금융은 또한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해 ‘포용금융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번 ‘대출금리 상한제’ 시행에 따라 우리은행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신용대출금리를 최고 연 7% 이하로 제한한다. 이는 우리은행 1년 이상 거래 고객 가운데 중저신용자 및 연 7%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 중인 금융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줄이는 목적이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 1년 이상 거래 고객의 기간연장(재약정) 시점에 맞춰 연 7% 상한제를 적용한다. 또한 내년 1분기부터는 대상을 더 확대해 우리은행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고 금리 연 7%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우리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최고금리는 12%다. 상한제 도입에 따라 현재 연 7~12% 금리에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최대 5%포인트(p)의 금리가

감면되며, 향후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도 보다 저렴한 금리에 대출 이용이 가능해진다.

우리은행은 또한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해 청년·주부·임시직·장애인 등 금융약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긴급생활비대출을 연 7% 이하 금리로 공급한다.

우리은행은 또한 ‘새도약기금’ 출시에 발맞춰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추심을 중단하고, 미수이자를 면제한다. 지원 대상은 1000만원 이하 대출 중 연체 기간이 6년 이상인 대출이다.

우리금융은 내년 1분기까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체자 지원 제도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 기자